

2019 호주 총선거결과 분석 및 시사점



Global Market Report

CONTENTS

목 차

요 약 / 1

Ⅰ. 호주 의회제도 현황 및 총선 결과 분석 / 2

- 2 | 1. 호주 의회제도 현황
- 5 | 2. 총선 결과 및 분석

Ⅱ. 한-호 경제에 영향을 주는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 / 8

- 9 | 1. 외교
- 10 | 2. 농수산·임업
- 11 | 3. 인프라
- 13 | 4. 부동산
- 15 | 5. 세금
- 17 | 6. 의료
- 18 | 7. 환경·재생에너지
- 19 | 8. 이민·취업

Ⅲ. 주요 산업별 반응 / 21

Ⅳ. 시사점 / 26

- 26 | 1. 우리기업에 대한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 33 | 2. 시사점

요 약

□ 총선 결과

- 집권여당인 자유국민연합, 하원의석 151석 중 75석 확보
 - 2013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 여당집권 확정

□ 자유국민연합당 주요 공약

정책	주요내용
외교	태평양 지원 확대, 對美 동맹 강화 對中 외교 대응 현상 유지
농수산·임업	농수산업 육성, 산림 산업 지원 강화
인프라	전국 1000억 규모 인프라 사업, 광통신망 프로젝트 완료
부동산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 혜택 유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확대
세금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배당세액공제 혜택 유지
의료	공공보건 지원금 확대, 개인의료보험금 부담 완화
환경·에너지	탄소배출량규제 대한 기업 부담 완화,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 확대

□ 주요 산업별 반응

- (인프라건설) 호주철도협회, 고속열차 건설 추진 환영
- (의료·바이오) 호주의료협회, 의료 및 건강 시스템 지원 개선에 만족
- (광산업) 호주광물자원협회, 광물 프로젝트 개발 규제에 반발 의사 표명
- (소비재) 호주소매연합, 경제 부흥 통해 국내기업 생산력 높이고 소비재 유통 원활할 것 기대
- (환경·에너지) 보수적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로 기업부담 경감, 장기적 접근법으로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시사점

- (기회요인) 경기부양정책으로 기존 자동차·가전·의료기기등 수출 진작에 더불어 재생에너지·인프라·건설·농수산업·광산업 시장 유망
- (위협요인) 내국민·내국기업 우선(Australia First) 정책기조
- (시사점) 우리기업 對호주 비즈니스에 유리한 유망시장 집중 공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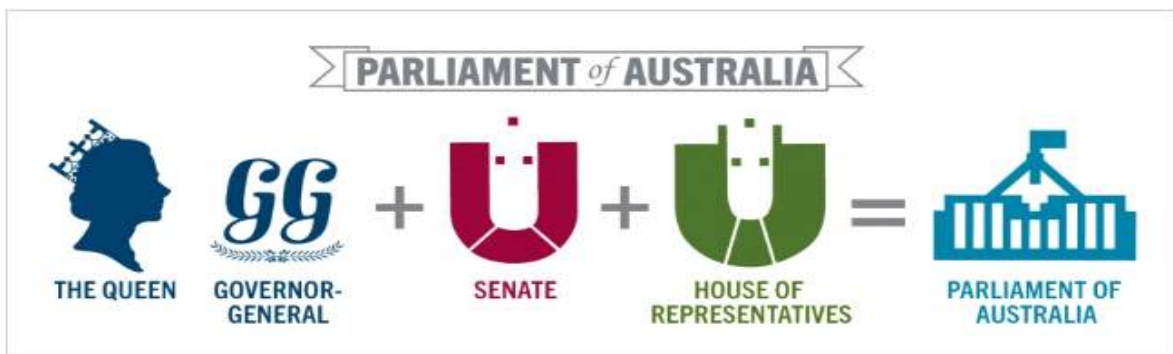
I 호주 의회제도 현황 및 총선 결과 분석

1. 호주 의회제도 현황

□ 정치 체제

- 영국여왕을 국가원수로 하는 입헌군주제
 - 호주의 정치제도는 미국의 연방제도와 영국식 의회주권에 입각한 내각책임제를 혼합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
 -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정부와 주정부(6개 주 및 2개 준주)로 구성
 - 연방정부는 헌법에 열거된 권한만을 보유, 잔여권한은 주정부에 귀속
 - 각 주정부는 지방정부를 구성, 560개의 시 의회를 보유함
 - 호주의 국가원수는 형식상 영국여왕이나 실질적으로는 연방총독이 여왕을 대신하여 국가원수 기능을 수행
 - 호주 정부를 이끄는 실질적 책임자는 선거를 통해 정부를 구성한 정당 대표인 연방총리로 정부 각 분야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호주의 국회 >



자료원: 국회교육사무소(Parliamentary Education Office)

- 연방정부 시스템의 上·下 양원제
 - 호주 의회(Parliament)는 연방정부 시스템의 상·하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하원과 상원에 동등한 권한을 배분하고 있음

□ 주요 정당

명칭 및 로고		자유당 (Liberal Party of Australia) 	노동당 (Australian Labor Party) 
설립년도		1944	1901
현 당대표		Scott Morrison	Bill Shorten
정당 색		파란색(Blue)	빨간색(Red)
홈페이지		www.liberal.org.au	www.alp.org.au
의석수	상원	31(자유연립, 2019.4.15.기준)	25(2019.4.15.기준)
	하원	75(자유연립, 2019.5.20.현재)	67(2019.5.20.현재)
이념		보수주의	민주사회주의
특징		- 연립(Coalition)당 소속 주요 정당 - 노동당의 의회진출에 자극받은 업계가 이익단체를 형성, 현재 자유당의 기반	- 현존 호주정당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된 호주 최초 근대정당
지지기반		- 고소득층, 중산층, 노동자층 등으로 다양 - 주요 재정적 지지기반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집중	- 농민, 공무원, 노동자, 전문직 종사자 등 중산층 다수 - 블루 카라(blue-collar) 계층 전반
주요정책		- 자유 기업체제 장려 - 개인의 자유 진작 - 중산층 및 고소득자들의 세금 혜택 - 자원개발 및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실질적 고용창출 실현 - 효과적인 노사관계의 발전	- 사회 구성원의 정치, 경제 참여 등, 권력의 재분배 - 고소득자들에 높은 세금 부과 등, 부의 재분배 - 개인평등의 실현 - 노사관계 발전 및 산업 내 민주주의 실현 - 난민 수용 및 문화적 다양성 증진

* 5월 20일 현재 개표 77% 기준

□ 선거제도

○ 의무 선거제도(compulsory voting)

- 호주는 1911년 의무적 선거인 명부등록 제도를 도입, 연방 차원에서는 1924년부터 의무투표 제도를 시행함
- 18세 이상의 호주시민은 선거관리위원회(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를 통해 선거명부에 필히 등록해야하며 선거명부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선거권이 있는 호주 시민이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됨

* 우편 통한 사전투표 가능. 해외 체류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 통보 필요

□ 투표제도

○ 상원 선출제도 : 대선거구, 비례대표제

- 호주 상원(Senate)은 주별 인구수에 관계없이 대선거구제도를 통해 선출되며 6개 주와 2개의 준주가 각각 하나의 대선거구가 됨
- 6개 주에서는 임기 6년의 상원의원 12명씩을, 2개 준주에서는 임기 3년의 상원의원 2명씩이 선출되어 총 76명의 상원의원이 선출
- 상원의 선출은 국민들의 정당선호투표로 이루어지며, 일종의 간접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에 해당

○ 하원 선출제도 : 소선거구, 선호투표제

- 하원은 상원과 달리 인구비례에 의해 설정된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151명 (인구 증감에 따라 조정가능)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임
- * 2017년 8월 31일 호주 선거 관리위원회가 하원의원 구성원을 기존 150명에서 151명으로 늘어날 것을 발표
- 호주는 후보자들에 대해 선호하는 우선순위를 기재해 투표하는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와 소선거구제를 하원 투표에 적용하고 있음

2. 총선 결과 및 분석

□ 총선 결과

○ 자유국민연합의 재집권 확정

- 2019년 5월 18일 실시된 호주 총선 결과, 자유국민연합이 단독으로 과반의석 확보에 성공하여 3번째 재집권이 확정됨
 - 자유국민연합은 개표 75% 기준 151의석 중 과반에 가까운 75석을 확보(자유당(Liberal) & 자유국민당(Liberal National Party): 65석, 국민당(The Nationals): 10석, 자유국가당(Country Liberals): 0석)하였으며, 유력 경쟁당이었던 노동당은 67석 만을 차지함
 - 이번 총선 사전 여론조사 및 출구 조사를 통해 노동당의 승리가 확실되는 분위기였으나 개표 중반 자유당연립당이 높은 우세를 보이며 승리가 확정됨
- * 호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은 전체 의석 151석 중 절대 과반인 76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내각을 구성하고 해당 정당의 당수가 총리가 됨

< 정당별 득표율 및 의석 수 >

정당	당수	확정 의석수	우세지역 의석수
자유 연립당 (Liberal/National Coalition)	Scott Morrison	75	2
노동당 (Australian Labor Party)	Bill Shorten	67	1
녹색당 (The Greens)	Richard Di Natale	1	0
캐터스 호주당 (Katter's Australian Party)	Bob Katter	1	0
센터 연합당 (Centre Alliance)	Nick Xenophon	1	0
독립당 (Independents)		3	0
합계		151	

자료원: Australian Electoral Commission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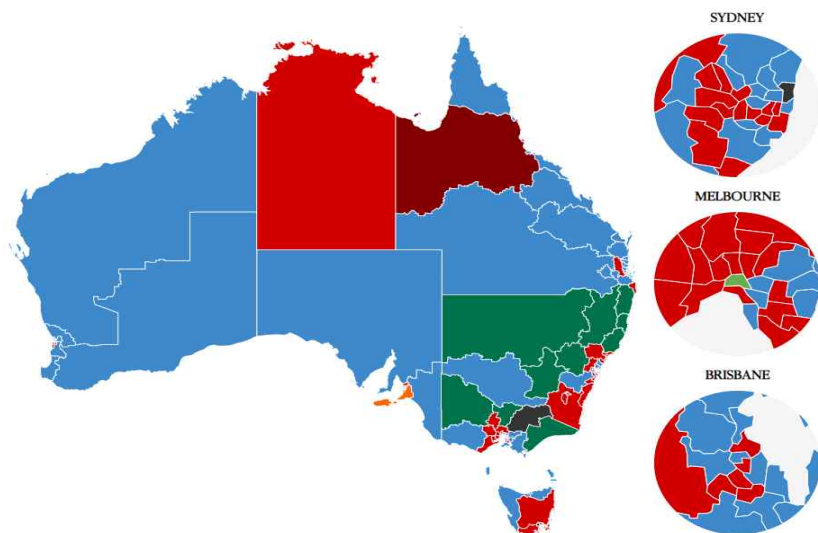
* 5월 20일 현재 개표 77% 기준

□ 선거 결과 분석

○ 자유국민연합 기적의 재집권 확정

- 지난 5월 18일 노동당 당수 빌 쇼튼의 패배 인정선언과 함께 최종 자유국민연합의 승리가 확정됨
- 호주 내 유력 언론 및 총선 여론조사를 통해 노동당의 집권 탈환이 예상되었으나, 불과 개표 50% 만에 노동당의 패배가 확실시 됨. 노동당 당수 빌쇼튼은 투표일 저녁인 11시 35분께 패배 인정 선언과 함께 노동당 당수직에서 물러나 Maribyrnong 지역 의원으로 남을 것을 공식 발표함
- 2013년과 2016년에 이어 3번째 재집권에 성공한 자유국민연합 대표 스콧 모리슨은 “나는 항상 기적을 믿었다.” 라는 말을 시작으로 자유국민연합의 승리를 선언하였음
- 한편, 노동당의 네거티브 기어링 및 소득세 등급 조정안 폐지, 탄소배출 감축 목표 등 일부 급진적 공약들이 생점화 되면서 이를 지적하고 순차적 변화에 중점을 둔 자유국민연합의 정책에 국민들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보임

< 2019년 지역별 선출 정당 비교 >



자료원: 호주신문 The Australian

* 붉은 색은 노동당을 상징, 푸른색(파란색, 진녹색, 하늘색)은 자유국민연합을 나타냄

II

한-호 교역에 영향을 주는 주요정책 및 예상효과

구분	공약내용	예상효과
외교	● 태평양 지원 확대 : 태평양 지역 금융 시설 인프라 위해 20억 호주달러 투자 ● 미국 동맹 강화 : 지역 안정 및 국익 향상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 중국과는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남태평양 도서국 대한 인프라 투자 및 상호 무역 증진 기대 ● 對 美·中 외교 정책 현 방향성 유지
농수산·임업	● 농수산업 육성 : 2030년까지 호주 농수산업 1,000억 호주달러 규모 육성. 국내 농수산물 수출 부문 2,940만 호주달러 추가 지원 ● 산림 산업 지원 : 2천만 호주달러 규모 국립 산림 산업 계획 추진	● 농수산물 산업 증진 및 FTA 추진 활발 ● 호주 삼림 부문 성장 및 호주 천연 목재 산업 개선
인프라	● 전국적 인프라 사업 : 향후 10년 국내 교통 인프라에 1,000억 호주달러 투자 ● 광통신망 프로젝트 사업 : 호주 광통신망(NBN) 프로젝트 FTTN 방식으로 2020년까지 완료	● 교통 및 도로 개선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추진 ● 일자리 창출, 건설 및 인프라 관련 자재 수요 증가
부동산	● 부동산 정책 유지 :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 소득세 50% 감면 혜택 유지.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규제 강화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 주택 보증금 5%와 최소 보증금 20% 사이의 차액을 정부가 보증. First Home Super Savers Scheme 유지	● 국내 부동산 투자 현상 유지 반면, 외국인 투자는 지속 감소 ● 국가 보조금 지원 제도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속 늘어날 전망

세금	●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 2024년까지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득 세율 최고 30%대로 인하 ● 배당세액공제 혜택 : 이중과세 막기 위한 배당세액공제 혜택 현 정책 유지	● 과세 구간 간소화로 고소득층에도 향후 감세 혜택 부여 ● 소비 진작 및 투자 증가 통한 호주 경기 부양 효과
의료	● 공공보건 지원 확대 : 공공병원 대한 정부 지원, 향후 3년간 12억 5,000만 호주달러 배정 ● 개인의료 · 공공병원 상생 강조 : 개인의료보험 부담 완화 위해 공공병원 부담 추진	● 특이질환 및 전반 공공의료 혜택 확장 ● 의료기기 및 의약품 수요 증가
환경 · 재생에너지	● 탄소배출량 감축 :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6-28% 감축 계획안 발표 ● 재생에너지 확대 : 3년 간 재생 에너지 산업에 150억 호주달러 투자	● 탄소 배출량 규제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으로 기업 부담 경감 ● 신재생 에너지 산업 투자 증가

1 외교정책 : 태평양 지원 확대, 미국 동맹 강화

□ 對 태평양 중국 영향력 견제한 태평양 지역 투자 증대

- (주요 내용) 태평양 지역 금융 시설 인프라 위해 20억 호주달러 투자
 - 태평양 지역의 중국 영향력 증가를 견제. 對 태평양 주요 파트너로 안착하기 위한 원조 및 투자 확대
 - 태평양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 및 금융 시설 지원 위해 호주 수출 금융 기관 대한 지원금 증대
- (야당 반응) 노동당 역시 태평양 지역 내 인프라 개발 은행(Infrastructure Development Bank) 설립 통해 해당 지역의 안보를 강화하고 파트너 국가로서의 호주 지위 향상을 도모
- (예상 효과) 호주의 남태평양 도서국 대한 금융 및 인프라 투자 확대. 2017년 6월 체결된 태평양지역경제협력협정(Pacific Agreement on Closer Economic Relations (PACER) Plus) 발효 추진 및 상호 무역 증진 예상

□ 對 美 동맹 강화 통한 국익 향상 도모

- (주요 내용) 미국 동맹 강화, 중국 외교 현상 유지
 - 호주의 지역 안정 및 국익 향상 위해 견고한 동맹국 네트워크 및 보안 역량 보유한 미국과의 동맹 강화
 - 중국은 호주 주요 파트너 국가 중 하나로 중국과의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위해 노력할 것
- (야당 반응) 호주, 美·中과 국익 관점 달라, 자립적 목소리 필요 주장
 - 미국과 호주는 가까운 이웃이나 엄연히 경제 구조 달라, 국익에 대한 관점에는 분명히 차이 있어. 미국과 우호적 동맹 관계 유지하되 의견차이 대해서는 자립적 의사 표현할 것을 피력
- (예상 효과) 對 美·中 외교 정책 기존 방향성 유지할 것으로 전망

2 농수산업 정책 : 농수산업 육성, 산림 산업 지원

□ 국내 농수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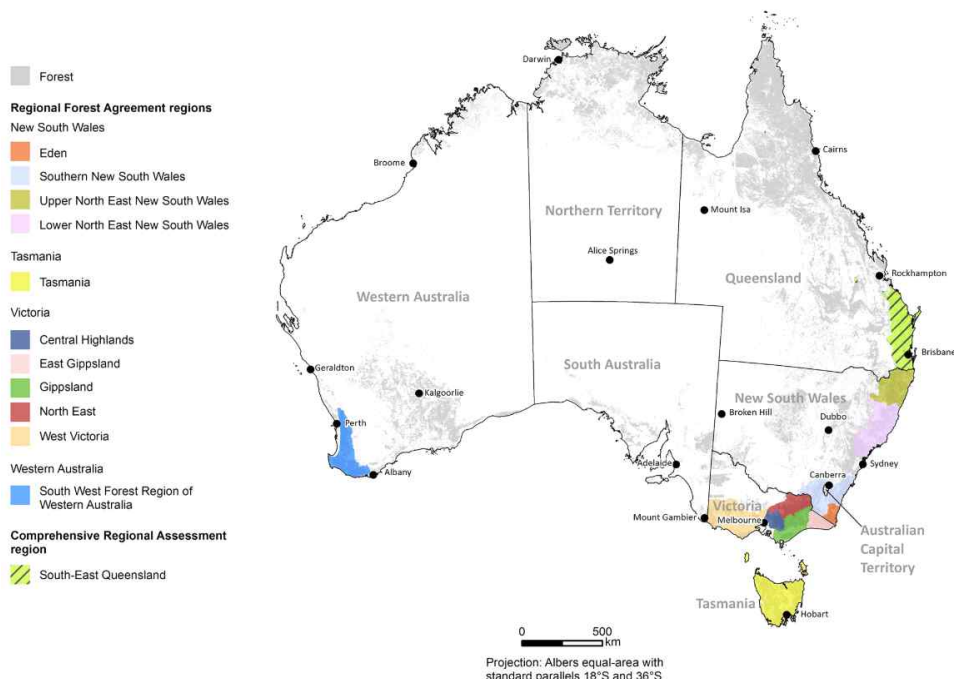
- (주요 내용) 2030년까지 호주 농수산업 1,000억 호주달러 규모 육성
 - 농수산 및 임업 부문 4,340만 호주달러 추가 지원, 가뭄 및 홍수로 인한 농가 피해 대책 위해 3,640만 호주달러 추가 지원, 농업 전시 및 관련 이벤트 활성화에 3,000만 호주달러 지원
 - 농수산물 무역 활성화 위해 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태평양 지역 파트너십 확대 등 추진. 국내 농수산물 수출 부문에 2,940만 호주달러 추가 지원
- (야당 반응) 국내 농수산업 육성 지원 한편, 일부 해외 수출 축산물 대한 규제 강화해야 함을 강조
 - 중동으로 수출되는 호주 산 양 운송 과정 잔학성 종식 위해 북반구 기준의 여름 시즌 산 양 수출 금지. 이후 호주 산 양 수출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을 주장
- (예상 효과) 국내 농수산 부문 육성 및 수출 대한 정부 관심 높아, 향후 농수산 및 축산 제품 수출 시장 고려한 FTA 추진 가능성 제고

□ 산림 산업 혁신 및 지속 가능 성장 도모

- (주요 내용) 2천만 호주달러 규모의 국립 산림 산업 계획 추진
 - 산림 산업 효율 및 제약 분석, 개선책 연구 가능한 허브 구축. 현재 호주 전역에 4개 허브 개발 중이며 이후 추가 4개 허브 추가 개설 예정
 - 호주 원시림, 지속 성장 및 유지 관리 가능하도록 지역 산림 협약(RFA) 지원. 매 5년 RFA 진행 사항 공개 보고

- (야당 반응) 삼림 부문 기술 개발에 3년간 4만 호주달러 지원.
국내 목재 및 종이 제품 대한 수출 지원 확대 주장
- (예상 효과) FRA 추진 통한 호주 삼림 부문 성장 및 호주 천연
목재 산업 개선 기대
- * 지역 산림 협약(Regional Forest Agreements; RFAs) : 호주 원시림의 지속 가능한
관리 및 보전을 위한 20년 계획. 빅토리아 주 5곳, 뉴사우스 웨일즈 주 3곳,
서호주 및 타즈매니아 주에 각각 1곳 씩 RFA 운영

<지역 산림 협약 관련 지역>



자료원: 호주농수산자원과학부, 국가 산림 목록

3

인프라 정책 : 전국적 인프라 사업, 광통신망 프로젝트 사업

□ 10년 계획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

- (주요 내용) 향후 10년 국내 교통 인프라에 1,000억 호주달러 투자,
향후 4년간 약 420억 호주달러 주요 인프라 구축에 투자
 - 기차역 주차장 건설 및 교통량 관리 등 도시 혼잡 완화 기금
40억 호주달러 투자

- 시드니 서부 및 북동 철도 연결 1단계 건설에 35억 호주달러 투자
- 45억 규모의 주요 도로 업그레이드 및 화물 노선 개선 작업으로 농업 및 광산 수출업체 운송 시스템 향상
- (야당 반응) 장기 프로젝트 치우친 10년 인프라 계획 및 기 프로젝트 완료 시기 지연 비판. 국내 경제 및 고용시장에 영향 줄 수 있는 우선 인프라 프로젝트에 신규 100억 호주달러 투입 주장
- (예상 효과) 호주 전역 교통 및 도로 인프라 개선 위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추진될 전망. 관련 분야 원자재 수요 증가 및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호주 10년 인프라 프로젝트 플랜 맵>



자료원: 2018-19 호주 연방정부 예산안

□ FTTN(Fibre to the Node) 방식 광통신망(NBN) 프로젝트 지속 추진

- (주요 내용) 호주 최대 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인 광통신망(NBN) 프로젝트 FTTN 방식으로 2020년까지 완료
 - FTTN 방식, 기존 노동당 발표 NBN 프로젝트 대비 300억 호주달러 절약 및 인프라 구축 완료 시기 6년 단축
 - 호주 전역 99% NBN 설치 완료 및 진행 중이며, 도심 지역 93% NBN 구축 완료 및 진행중. 2020년까지 모든 호주인들 NBN 연결 가능
- (야당 반응) FTTN 방식 광통신망 비판 한편, 품질 개선 방안 구축 주장
 - 고객 불만 높은 FTTN 방식 광통신망 배선 문제 해결 및 최대 75만 가구에 모뎀 연결 품질 및 접속 속도 개선 강조
- (현지 반응) NBN 프로젝트는 기존 FTTN 방식으로 완료 될 전망. 소비자 불만 높은 NBN 연결 품질 및 속도 개선 여부 의문시

< 광통신망(NBN : National Broadband Network) 프로젝트 >

- 2009년 초 노동당이 발표한 호주 최대 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
- 총 8년간 4백30억 호주달러 투입 계획
- 호주 인구의 93% 이상을 포함하는 지역을 기존 1Mbps에서 100Mbps 통신 속도로 변경
- 2013년 9월 자유국민연합으로 정권 교체되면서 FTTN(Fiber-To-The-Node) 방식으로 계획 수정됨

4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정책 유지,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 중산층 투자자 상생 강조, 현 부동산 정책 유지

- (주요 내용)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 소득세 50% 감면 혜택 현상 유지
 - 130만명 가량 호주인, 개인 부동산 투자 대한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 받고 있으며, 이중 2/3 가량은 과세 소득 8만 호주달러 미만
서민. 현 제도 유지 필요성 강조

- 외국인 부동산 구입 시 은행 대출 제한 및 부동산 구매 후 첫
6개월 거주 필수(거주하지 않을 경우 연 5천 호주달러 부과) 등
해외 투자자 국내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

*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도 : 투자용 부동산을 통해 받는 임대
수익금이 유지 및 관리에 사용된 금액보다 적을 경우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야당 반응)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 주장
- (예상 효과) 국내 부동산 투자 현상 유지 반면, 외국인 투자는
지속 감소할 전망

□ 첫 주택 구매자 및 소외 계층 위한 부동산 정책 강조

- (주요 내용)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원 정책 확장, 피해 계층
임시 거주 시설 지원 투자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 가격의 5% 보증금만으로도 집 구매
가능하도록 정부 지원. 주택 보증금 5%와 최소 보증금인 20% 사이의
차액을 정부가 보증할 것을 공약

-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한 기존 자유당 정책인 First Home Super
Savers Scheme 현상 유지

*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슈퍼 세이버 제도(First Home Super Savers Scheme) :
퇴직연금(Superannuation) 적립금의 일부(최대 3만 호주달러)를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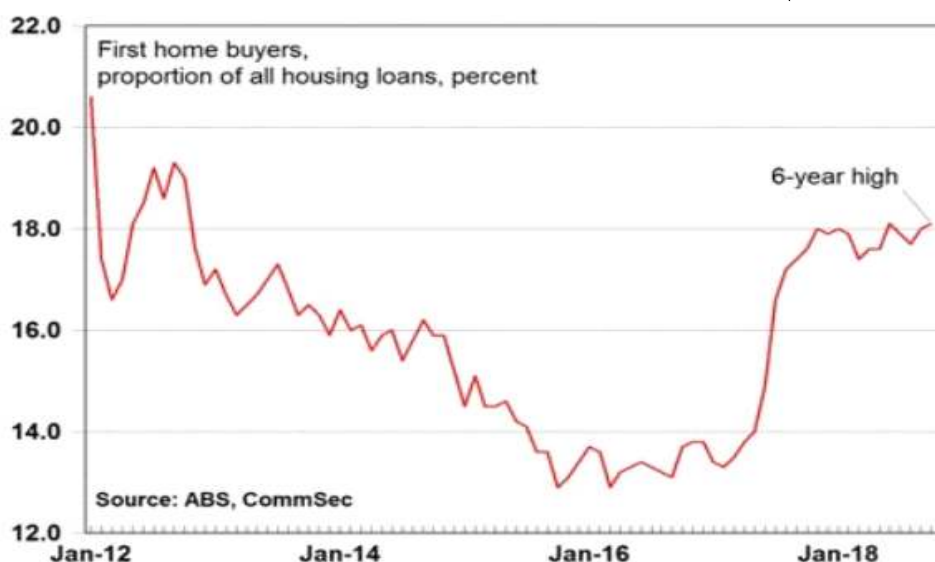
- 가정 폭력 피해자 거주지 신규 건설 및 구매에 7,800만 호주달러 지원
- 국가 주택 금융 투자 공사(National Housing Finance and Investment
Corporation) 통해 저소득층 위한 공동 주택 지원에 3억 호주달러 모금

- (야당 반응) 저소득층 위해 향후 10년간 25만 가구의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 주장

- (예상 효과) 부동산 거품 꺼짐 현상 및 국가 보조금 지원 제도로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지속 늘어날 전망. 호주 커먼웰스 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2월 기준, 호주 전체 주택 구매자 중 18% 가량이 생애 첫 주택 구매자로 최근 6년 만에 최고치 달성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비율 증감률>

(단위 : %)



자료원: 호주 통계청, 커먼웰스 은행

5 세금정책 :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배당세액공제 혜택

□ 저소득층, 중산층 2019 총선 최대 수혜 계층 될 것

- (주요 내용) 2024년까지 저소득층과 중산층 소득 세율 최고 30%대로 인하
 - 소득세 19% 구간의 소득범위를 2022-23까지 기존 18,201-37,000 호주달러에서 18,201-45,000 호주달러로 확대
 - 2019-2020 호주 연방 예산안에 따르면, 연 소득 37,001-90,000 호주달러 구간에 속한 납세자는 최대 1,080 호주달러의 세금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야당 반응) 2024년까지 진행되는 현 정부의 소득세 감면 정책전체 근로자 94%에 대한 30%세율 적용 계획 및 2,3 단계 소득세 등급 조정 폐지 주장
- (예상 효과) 저소득, 중산층 소득세 감면 정책 방향은 노동당과 동일하나 장기적으로 과세 구간 간소화를 통해 고소득층에게도 감세 혜택 예상

<現 호주 정부의 회계 연도별 개인 소득세 계획>

소득세율 (2017/18 ~ 2023/24)	연 소득구간 (2018/19 ~ 2021/22)	연 소득구간 (2022/23 ~ 2023/24)
0%	A \$0 ~ 18,200	A \$0 ~ 18,200
19%	A \$18,201 ~ 37,000	A \$18,201 ~ 45,000
32.5%	A \$37,001 ~ 90,000	A \$37,001 ~ 120,000
37%	A \$90,001 ~ 180,000	A \$120,001 ~ 180,000
45%	Above A\$ 180,000	Above A\$ 180,000

자료원 : 2019/20 호주연방정부 예산안(Budget.gov.au)

□ 배당세액공제 혜택 현행 유지

- (주요 내용) 수급자의 형평성 고려, 배당세액공제 유지 필요성 강조
 - － 배당세액공제 혜택은 이중 과세를 막기 위한 제도임을 주장. 자유당이 집권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현행 유지할 것으로 예상
- (야당 반응) 배당세액공제 혜택 축소 및 폐지 할 것
 - － 향후 10년 동안 배당세액공제혜택 폐지를 통해 총 590억 호주달러의 세수 절감을 주장
- * 배당세액공제 : 주식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세 면제 혜택과 더불어 주식 투자자들이 세금 공제액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을 경우 환급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현지 반응) 배당세액공제 혜택 유지 환영. 노동당의 폐지 추진은 슈퍼퇴직연금 수령자, 주식투자자 등 배당세액공제 수급자들의 이해관계 및 형평성의 문제로 난항을 겪었을 것이라 주장

6 의료 정책 : 공공보건 지원 확대, 개인의료·공공병원 상생 강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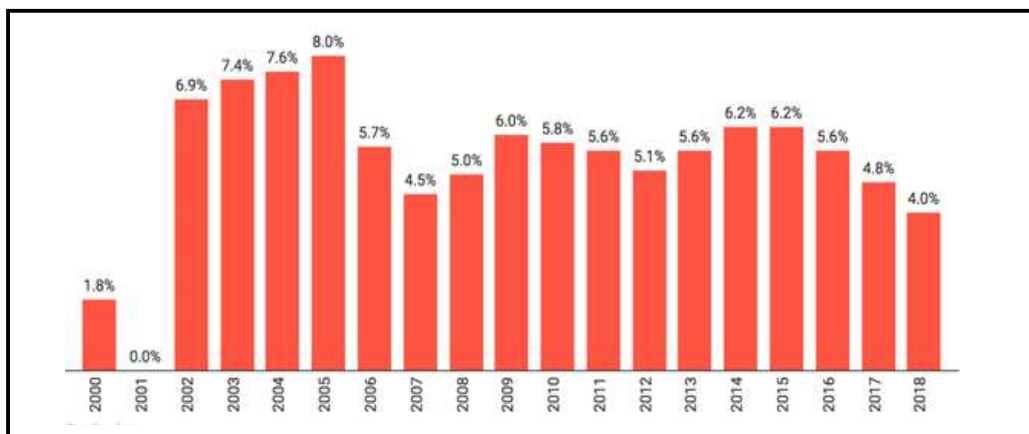
□ 의료분야 대한 정부지원, 4년에 걸쳐 약 80억 호주달러로 증가

- (주요 내용) 공공병원 대한 정부 지원, 향후 3년간 12억 5,000만 호주달러 배정
 - 농촌지역 진료 혜택 확대 위해 1억 호주달러 투자
 - 희귀 질환에 대한 공공보건 차원에서의 전문치료 확대. 낭포성 섬유증 전문과 신설 위해 6,500만 호주달러의 예산 지원
 - 마약 및 알코올 치료 확대,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에 총 4억 6,100만 호주달러 예산 지원(안) 발표
- (야당 반응) 공공병원 병상 확충, 헬스케어 근로자 증원, 시설 개선 확충,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등에 대한 지원 피력
- (현지 반응) 의료분야 대한 정부지원 증액으로 1차 진료, 희귀 질환, 정신건강, 공공병원 및 의약품 등 전반 의료혜택이 늘어날 전망

□ 개인의료보험·공공병원 상생 추구 방안 모색할 것

- (주요 내용) 개인의료보험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공공병원의 부담을 분담하게 할 것
 - 개인의료보험료 인상률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현 정부의 개인의료보험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
- (야당 반응) 개인의료보험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위해 생산성 위원회(Productivity Commission)를 수립할 것을 제시
 - 개인의료보험료 인상폭 연 평균 4-5%에서 향후 2년 동안 2%로 제한
- (현지 반응) 개인의료보험, 가격 및 등급에 따라 서비스의 질에 차이 있어, 인상폭 낮추더라도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근본적 문제 해결 가능할지 의문

< 호주 2000-2018 개인의료보험 인상률 변화 추이 >



자료원 : 호주 국회의사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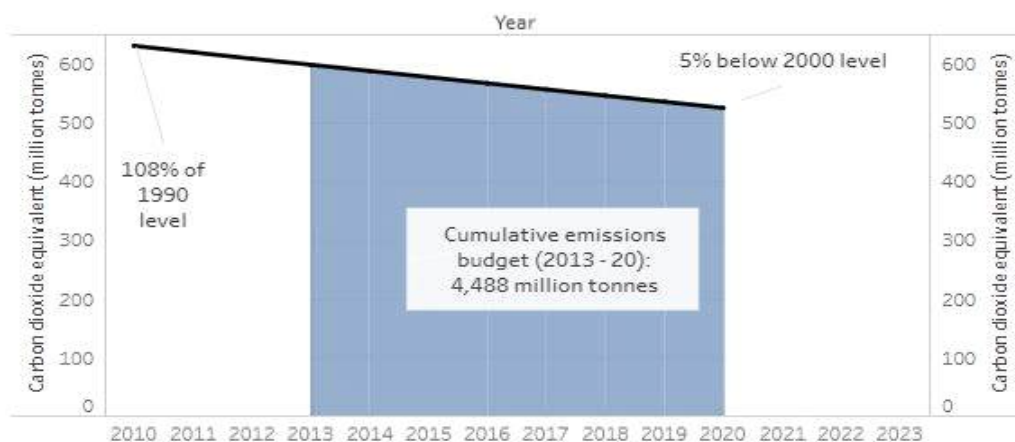
7 환경·재생에너지 정책 : 탄소배출량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 보수적 설정

- (주요 내용)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 26-28% 감축 계획안 발표
 - 토지 및 농업 부문 내 다양한 배출 감축 프로그램 지원 예정
- (야당 반응)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5%로 상향 조정 계획안 발표
 - 2050년까지 탄소 배출 0% 달성을 공약

< 연도별 호주 누적 탄소 감소량 >

(단위 : 백만 톤)



자료원 : 호주 환경부 (Department of Environment)

- (예상 결과) 노동당 대비 탄소배출량 감축 목표의 보수적 설정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예산 배정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

□ 재생에너지 투자 지속적 확장으로 성장세 이어질 전망

- (주요내용) 3년 간 재생 에너지 산업에 150억 호주달러 투자
 - 재생 에너지의 주요 프로젝트인 스노위 (Snowy Hydro) 수력발전 13억 호주달러 투자 사업 투자 확대할 것
 - 기후변화 개선 부문에 20억 호주달러 지원
- (야당반응)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중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 50% 달성 주장
- (예상결과) 노동당과 자유국민연합 모두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부적인 투자 분야만 다를 뿐 전반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됨

8 이민·취업 정책 :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취업비자 취득 조건 완화

□ 외국인 취업자의 지방 이주 유도 정책 확대

- (주요 내용) 2018년 TSS비자(외국인 임시취업비자) 제도 신설을 통해 외국인의 호주내 취업조건을 강화. 2019년 11월 지방의 인력부족 지역을 대상으로 한 TSS비자 보완제도 도입 예정
 - 북부준주와 같은 인력수급이 어려운 지역은 DAMA(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마련을 통하여 TSS비자 제도 취득 조건을 완화 및 인력 유치 노력중
 - 기존 지방 고용주 후원 비자(RSMS, Regional Sponsored Migration

Scheme)을 대체할 제도 또한 2019년 11월 도입될 예정

<TSS비자 제도>

- 임시취업비자 취득 가능 직업군을 중장기와 단기로 구분
 - 중장기 직업군은 4년짜리 비자를 승인해주며 비자 취득 3년후 영주권 신청을 가능토록 함
 - 단기 직업군에게는 비자기간을 2년으로 한정시킴 (1회 연장 가능)
- ※ 중장기/단기 구분 기준 : 국내 인력 부족 여부
- 취득 조건으로 비자 신청전 ① 사전 경력 2년을 의무화하였고, ② 영어 점수 또한 상향 조정한 바 있음

- (야당 반응) 공약사항을 통하여 현행 TSS제도를 더욱 강화시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① 내국민의 구직여건 개선과 ② 고용주의 외국인 채용시 부담분 확대가 주요 골자를 이룸
- (현지 반응) 대도시의 경우, 집값 상승과 인구집중으로 인한 삶의 질 저하를 지적하는 국민들의 불만이 거센 반면, 지방의 경우 여전히 기술 인력 구인난이 극심한 상황임. 시드니 소재 현지 거주자 대상 여론조사 결과 63%가 이민제한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힘
- (예상 효과) 당분간 외국인들에 대한 폐쇄적인 이민정책은 유지될 전망이다. 단, 인력부족 직업군 및 지역을 대상으로는 예외적 제도완화가 예상되는 만큼 호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은 이미 시행되었거나 시행 예고된 지역별 비자발급 제도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V

주요 산업별 반응

산업구분	총선에 대한 반응	기상도
인프라·건설	- (호주철도협회) 도심 집중현상 및 도로혼잡 개선 가능한 고속열차 건설 추진 환영	맑음
의료·바이오	- (의학전문기자) 암 관련 의약품 및 관련 진단스캔 비용 절감 기대 - (호주의료협회) 주요 의료 및 건강 시스템에 대한 정부의 기존 혜택 유지 및 개선에 만족	맑음
광산업	- (호주 광물자원협회) 자유당의 광물 프로젝트 개발 규제, 호주의 미래 산업을 막는 행위. 반발의사 표명	비
재생에너지	- (클린에너지 협회) 에너지 저장 시스템 설치 대한 무이자 대출 지원 환영	맑음
부동산	- (부동산 전문연구원)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출 보증금 지원 제도 근본적 주택문제 해결책 될 수 없음 우려 - 국내 주택 투자 환경 줄어든 반면,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 지속 기조	맑음
소비재	- (호주소매연합) 기업들의 생산력을 높이고 소비재 유통을 원활하도록 하는 경제 부흥 정책을 환영	맑음
농수산업	- (국가농민연맹) 정부의 호주 농가 산출량 1,000억 호주달러 비전 정책 환영	맑음

□ (인프라·건설) 현 철도 및 일부 고속열차 건설 계획 환영

- 자유당은 재집권 시 현재 진행 중인 철도 및 도로 개선 계획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향후 20억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멜버른-질롱(Geelong) 간 고속열차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또한 4백만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시드니-울롱곤, 시드니-파크스, 멜버른-타랄곤, 멜버른-올버리-워딩가 및 브리즈번-골드코스트 간 고속열차 건설 필요성을 타진할 예정이며, 조사 결과가 긍정적인 경우 고속열차 건설에 예산을 추가하겠다는 계획임
- 호주철도협회(Australian Railway Association; ARA)은 자유당의 멜버른-질롱(Geelong) 간 고속열차 건설 추진 및 지원을 환영한다고 하며, 고속열차는 도시 간 이동시간을 축소시킴으로써 도심지역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도로 혼잡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탄소 및 기타 오염 배출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의료·바이오) 약값 부담 완화 및 암 진료비 지원 확대

- 자유국민연합은 노동당과 마찬가지로 메디케어 환급금 확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 한편, 암 진료를 메디케어 급여 항목에 포함시키겠다는 노동당의 공약은 재정적으로 실현가능하지 않다며 3억 호주달러의 예산을 투자하여 암 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의 약값을 줄이는 데 힘쓰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음
- 호주 ABC 뉴스의 의학 전문 기자 소피 스콧(Sophie Scott)은 자유당과 노동당 모두 저렴한 의료 혜택 보장을 공약하였으며, 특히 암환자 지원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며, 자유당 집권으로 암 관련 의약품 외에도 관련 진단스캔(Diagnostic scans) 비용이 절감될 것을 예상하였음. 한편, 자유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이 MRI 및 PET 스캔을 받을 수 있도록

- 관련 부문에 총 3억 7,500만 호주달러를 지원할 것을 약속한 바 있음
- 호주의료협회(Australi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자유당, 노동당 그리고 녹색당 모두 매우 환영할만한 의료정책 발표가 있었지만 노인 간호, 지방지역 의료지원 등 일부 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 개선이 필요함을 암시함. 또한 AMA 대표 Barton 박사는 의약품 혜택 및 의료 연구 지원금 확대 등 주요 의료 및 건강 시스템에 대한 자유당 정부의 기존 혜택 유지 및 개선 정책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임

□ (광산업) 호주 광산업계, 자유당의 환경·재생에너지 관련 소극적인 정책 반겨

- 주요 탄소 방출 사업체로 지목되었던 호주 광산기업들은 노동당의 강력한 탄소 배출감소 정책 대비 비교적 소극적인 정책안을 내놓았던 자유당의 재선에 화색을 보이고 있음
- 하지만 호주 광물자원협회(The Minerals Council of Australia)는 최근 자유당의 광물 프로젝트 개발 규제 입장에 대해 호주의 미래 산업을 막는 행위라며 적극적인 반발 의사를 표명함

□ (재생에너지) 호주 탄소 배출 감축에 2억 호주달러 공약

- 스콧 모리슨 총리 겸 자유국민연합당 대표는 현재 관련 정책만으로도 2030년까지 파리협약 탄소 배출 목표의 26~28%를 너끈히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동당에 비해서는 다소 빈약한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내세우고 있음
- 자유국민연합은 향후 3년간 국립 에너지 시장에 150억 호주달러 투자할 것이라고 전하였으며, 호주 동남지역에 위치한 2개의 대형 댐을 지하 터널로 연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노위 하이드로 프로젝트 2.0(Snowy Hydro Project 2.0)에 13억 8천 호주달러를 투자하여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위한 구심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밝힘. 자유국민연합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현재 전력 발전량을 150% 이상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클린 에너지 협회(Clean Energy Council) 대표인 케인 손튼(Kane Thornton)은 자유국민연합의 태양열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최대 15,000 호주달러 무이자 대출 지원 공약은 보다 많은 가정에서 태양 에너지를 비축 및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라 지지하며 다른 재생 에너지 기술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저장 에너지 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선행 비용이라고 첨언함

□ (부동산) 현 부동산 지원 정책 국내 주택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 부동산 전문 연구원이자 저술가 핫스포팅(Hotspotting) 창설자 테리 라이더(Terry Ryder)는 부동산 관련 칼럼을 통해 “호주 부동산 정책은 국내 주택 가격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읽는데 실패했다.”고 언급하며 자유당의 부동산 공약 중 하나인 ‘생애 첫 주택 구매자 대출 보증금 지원 제도(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에 대해 “해당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은 연간 만명 정도에 지나지 않으며, 이는 이미 높게 형성된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였음
- 한편, 호주 내 주요 언론들은, 노동당이 폐지를 주장한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 소득세 감면 혜택 현상 유지로 인해 국내 주택시장의 불확실성은 줄어들었지만, 해외 투자자들의 국내 부동산 매입 규제 강화로 인해 외국인 투자는 지속 감소할 전망임을 밝힘

□ (소비재) 자유당 세금 정책, 국내 경기 부흥에 활력 불어 넣을 것

- 호주소매연합(Australian Retailers Association)은 자유당의 저소득 및 중산층 세금 감면, 중소기업자 세금 공제, 법인세 인세 정책을 통해 가계 가처분 소득 및 소비 증가가 예상되어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보임. 기업들의 생산력을 높이고 소비재 유통을 원활하도록 하는 경제 부흥 정책을 환영

□ (농수산업) 자유당의 농수산업 부양정책 환영. 로드맵 개발 등 적극 추진

- 호주농민연맹(National Farmers Federation)은 2030년까지 호주 농가 산출량 목표를 1,000억 호주달러로 부양하겠다는 현 정부 정책을 환영. 이를 위해 핵심 파트너 기업들과 Talking 2030이라는 로드맵을 개발하고 정부와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임

IV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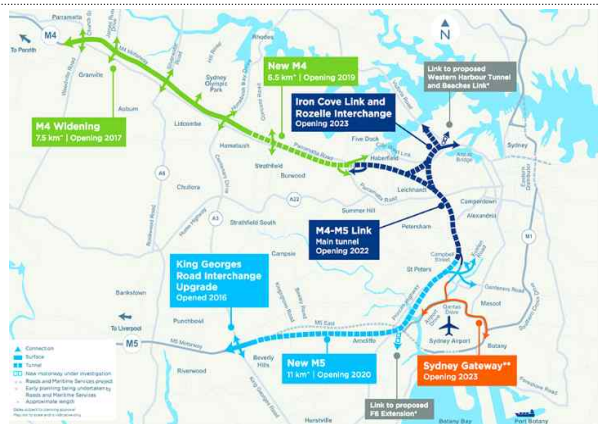
1. 우리기업 기회요인 및 위협요인

□ (기회요인) 현지 대규모 인프라, 신재생에너지, 광산 프로젝트 참가 기회 확대, 자유국민연합 경기부양 정책으로 자동차·가전·의료기기 등 대호 수출 진작 기대

-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사업 추진 : 프로젝트 및 기자재시장 유망
 - 향후 10년 국내 교통인프라에 총 1,000억 호주달러 규모의 예산 투입 약속으로 이에 따른 컨소시엄 프로젝트 수주, 용접, 건설자재 분야 등 우리기업의 호주 내 활동 기회 증가 전망

< 現 대표사례 : 호주 시드니 웨스트커넥스 M4 프로젝트 >

- 공사 개요 : 호주 시드니 웨스트커넥스(westconnex) M4 프로젝트는 시드니 도심과 남서부를 잇는 외곽 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길이 33km에 달하는 지하차도를 3단계로 나눠 공사 진행. 동 프로젝트는 2018년 착공하여 2023년 준공될 예정
- 공사 기간 : 2015년 초 ~ 2023년 말(약 9년)
- 총 사업비 : 약 A\$168억 (약 13조 9,581억원)
- 특기 사항 : 웨스트커넥스 사업은 우리 금융권과 건설기업의 공동 노력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공사수주를 연계 성공시킨 좋은 협력사례로서, 향후 호주정부가 발주예정인 여러 대형 인프라사업에 同 모델을 활용한 수주확대가 기대



M4 도로 공사 구간 지도



M4 도로 조감도

- 적극적 재생에너지 정책 : 친환경·재생에너지 기술선도 기업 유리
 - 온실가스 감축펀드, 천연가스 발전 확대 등을 통해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탄소배출량 26-28% 감축 목표 설정. 관련 산업에 대한 적극적 정부 지원으로 호주 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예상. 변압기, 태양전지 패널과 에너지 저장에 강점이 있는 한국 기업의 호주 진출기회 확대 기대
- 광물·광산 개발 프로젝트 육성 : 한-호 전략적 합작 비즈니스 기회 증가
 - 노동당의 급진적 탄소배출감소정책 대비 점진적·온건적 정책, 광산업분야 고용 확대, 고효율·저배출을 위한 기술 투자 등을 통해 회복세에 접어들고있는 호주 광산업 지속 발전 전망. 특히 최근 스마트마이닝 등 최첨단기술 도입 및 생산성 혁신에 적극적인 바, 광물추출 및 ICT 첨단기술 등에 강점이 있는 한국 기업의 호주 광산업 진출 확대 기대

< 現 대표사례 : 포스코-호주 필바라社 합작 리튬공장 설립 추진 >

- 합작투자 개요 : 전남 광양FEZ 내 포스코-필바라社 합작 리튬공장 설립 예정. 지분구조는 포스코 70%, 필바라社 30%.
- 공사 기간 : ~2020년 말(약 9년)
- 특기 사항 : 포스코의 PosLX는 포스코 고유의 리튬추출공정으로 필바라社가 합작투자를 결정한 결정적 이유중 하나. 합작 리튬공장은 필바라社 소유의 필간구라(Pilgangoora)광산에서 리튬정광을 조달받은 뒤, PosLX기술로 수산화리튬과 탄산리튬을 생산하게 됨



필간구라 광산 리튬-탄탈륨 프로젝트



포스코 PosLX

○ 농수산업 육성 정책 : 한·호 FTA 활용, 비즈니스 기회 확대 예상

- 현 정부는 국가차원에서 ‘농업 4.0(Agriculture 4.0) 정책 추진 중으로 농업에 첨단기술과 인프라를 더하고 농가에 투자자를 적극 연결, 농가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 現 대표사례 : 롯데 한국 최초, 호주 비육장 인수 추진 >

- 인수 개요 : 호주 퀸즐랜드 주 소재 샌들우드(Sandalwood) 비육장 인수, 대대적 투자. 호주 외투심의위원회 승인은 받은 상태.
- 특기 사항 : 샌들우드 비육장은 2000ha 규모의 호주 상위15위 안에 드는 비육장 중 하나로 주로 ‘곡물 비육(grain-feed)’ 소고기를 생산. 롯데는 지난 5년간 샌들우드 비육장을 통해 생산된 소고기를 수입한 최대 고객중 하나였음.
- 기대 효과 : 인수에 성공 시, 보다 안정적으로 호주산 소고기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퀸즐랜드 Sandalwood 비육장

- 이와 더불어 올해 초 한국은 호주 농업수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상주, 하동, 나주 3개 지역의 배와 한국산 거봉포도 수출이 가능해 지면서 대호 수출품목의 점진적 확대가 기대됨

○ 의료복지 증진 및 공공병원 지원금 확대 : 의료기기 수입 증가세 지속 전망

- 3억 호주달러의 예산 투자하여 암 환자를 포함한 환자들의 약값 부담 완화 및 암 진료지원 확대 계획. 2024-25년까지 공공병원 지원금 300억 호주달러규모로 확대 및 의료복지 개선에 대한 장기적인 투자 약속에 따라, 의료산업과 관련된 일반 의료 소비제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호주 의료기기 연도별/국가별 수입 동향 >

(단위 : 백만달러)

순위	국가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6	2017	2018	2018	
	전체	7804	7829	8316	100	6.22
1	미국	2491	2541	2638	31.72	3.78
2	중국	836	850	947	11.38	11.38
3	독일	688	673	747	8.98	11.02
4	일본	364	341	357	4.29	4.43
5	영국	299	309	338	4.06	9.42
23	한국	45	54	61	0.73	13.32

자료원 : Global Trade Atlas

주 : HS CODE 90 기준

- 자유국민연합당 경기부양 정책 : 한-호 교역 증진에 긍정 작용 예상
 -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을 위한 보조금 정책, 소득세 감면 등으로 소비 진작 및 경기활성화 도모

< 한국의 對호주 수출 상위 5대 품목 >

(단위 : 백만달러)

품목명	2017		2018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전체	19,862	164.8	9,610	△51.6
승용차	2,229	19.2	2,119	△4.9
경유	1,982	72.3	1,804	△9.0
제트유및등유	1,103	115.7	1,555	40.9
휘발유	969	△4.2	733	△24.3
축전지	140	25.8	138	△1.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주: 순위는 2018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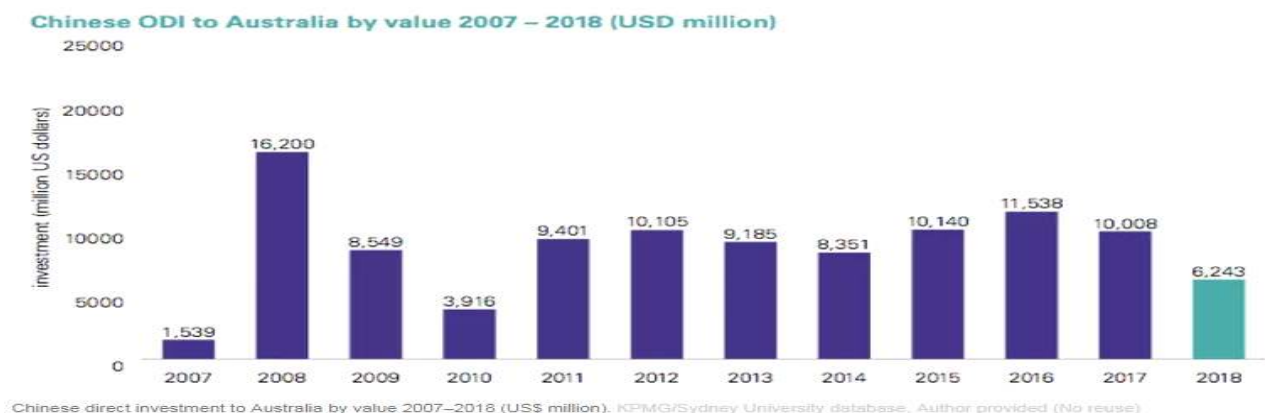
□ (위협요인) 최저임금 인상 등 비즈니스운영 인건비 부담, 내국경제 우선정책, 해외투자, 해외취업 축소 예상 등

- 인건비 인상 및 근로자 권익 증진 : 비즈니스운영 비용 부담 증가
 - 최저임금 인상,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 노조 권한 확대, 남녀 급여 평등화 추진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의 비즈니스운영에

인력운용 및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 이미 현재 세계 최고수준인 최저임금(A\$18.93)이 더욱 상향조정될 경우 호주 중소·중견기업뿐 아니라 해외기업들의 호주 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됨

- 내국기업·내국민 우선정책 : 우리기업 호주 내 비즈니스 기회 축소 우려
 - 건설, 인프라 등 정부주도 프로젝트 수주사업에 외국기업 의존도를 낮추고 호주 기업에 최대한 기회 부여 계획. 특히 인프라 구축 수요가 많을 외곽 지방지역에서 호주 기업에 제공되는 정부 특혜가 더욱 많아질 예정
 - 외국기업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를 엄격히 적용하고 제조업체에 있어 덤핑 제재 강화가 예상됨
- 부동산투자 세제 혜택 감소 : 해외 투자 축소 예상
 - 부동산 투자에 대한 혜택 감소로 국내외 투자 감소 전망. 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 특히 호주의 최대 투자국인 중국의 對호주 투자는 2017년 130억 호주달러에서 2018년 82억 호주달러로 약 36.3%가량 하락하였으며 이는 2008년 이래 사상 두 번째 최저치를 기록. 2018년 중국의 對호주 투자 중 부동산분야 투자는 전체투자의 36.7%를 차지하며, 동기간 32% 감소

< 2007-2018년 중국의 대호주 투자>



자료원 : KPMG, Sydney University DB

- 폐쇄적 이민정책 지속 추세 : 호주 취업, 비즈니스 기회 축소 우려
 - 도심지역 중심의 폐쇄적 이민제도 강화는 외국인보다 호주 노동자들의 현지 일자리 투입을 지원하여 한국인의 호주로의 이주 및 우리기업의 호주 내 사업 추진에 부정적 요인
 - 최근 ‘호주인·호주인의 일자리 우선주의’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자제도 강화로 호주 이민자 유입은 2018년 과거 10년간 최저수준 기록
 - 취업 및 거주가 가능한 TSS(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비자 신청 자체도 2018년 전년비 약 30% 감소하였으며, 비자 승인은 약 26%가량 감소
 - * 한국인 TSS 비자 승인건수 : 2016-17년 1,140명 → 2017-18년 810명으로 감소
 - 단, 호주 내에서도 이민제한정책이 호주 경제성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큼. 인력부족 직업군 및 지역, 호주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문기술직(skilled immigrants)에 대해서는 예외적 제도 완화 예상으로 호주 취업에 있어 보다 전략적 접근 필요

< 2016-2018 호주 주별 TSS 비자 승인 건수 >

Nominated Position Location	2016-17 to 30/06/17	2017-18 to 30/06/18	% Change from 2016-17	2017-18 as % of Total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710	570	-19.5%	1.7%
New South Wales	21,420	15,490	-27.7%	45.0%
Northern Territory	850	550	-34.8%	1.8%
Queensland	5,200	3,790	-27.1%	11.0%
South Australia	1,040	1,070	3.0%	3.1%
Tasmania	220	230	4.6%	0.7%
Victoria	11,720	9,350	-20.2%	27.1%
Western Australia	5,240	3,350	-36.0%	9.7%
Not Specified	80	50	-43.4%	0.1%
Total	46,480	34,450	-25.9%	100.0%

자료원 : 호주 이민성

< 2016-2018 국가별 TSS 비자 승인 현황 >

Citizenship Country	2016-17 to 30/06/17	2017-18 to 30/06/18	% Change from 2016-17	2017-18 as % of Total
India	10,400	7,920	-23.9%	23.0%
United Kingdom	8,260	5,850	-29.1%	17.0%
Philippines	2,870	2,520	-12.1%	7.3%
United States of America	2,590	1,770	-31.7%	5.1%
China, Peoples Republic of (excl SARs)	2,770	1,700	-38.7%	4.9%
Ireland, Republic of	1,900	1,470	-22.4%	4.3%
France	1,390	980	-29.5%	2.8%
Canada	1,030	830	-19.8%	2.4%
Italy	1,290	820	-36.1%	2.4%
Korea, South	1,140	810	-28.6%	2.4%
South Africa	870	720	-16.9%	2.1%
Japan	960	650	-32.0%	1.9%
Malaysia	730	620	-15.4%	1.8%
Germany, Fed Republic of	840	600	-28.4%	1.7%
Brazil	690	560	-18.9%	1.6%
Other Countries	8,770	6,630	-24.4%	19.2%
Total	46,480	34,450	-25.9%	100.0%

자료원 : 호주 이민성

2. 시사점

□ 총선 평가

- 여론조사와 출구조사로 노동당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되었으나 2018년 말에 비해 양당간 격차가 대폭 축소, 자유국민연합이 기적적으로 승리하며 충격적 반전 결과를 불러옴
- 최선호 정당 지지도가 역대 선거에서 최저수준으로 군소정당 지지자의 선호도 기재방식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침

□ 정책방향

- 온건한 기후변화 대응, 네거티브 기어링 및 양도소득세 감면혜택 현상유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주요 쟁점
- 저소득층·중산층 대상 소득세 인하, 임금 향상, 주택마련 및 적극적 일자리 문제 해결로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 도모

□ 현지 산업계 반응

- 자유국민연합 승리에 대해 인프라·건설·농업·부동산·소비재업계는 환영, 광산·재생에너지 업계는 다소 우려를 표명

□ 우리기업 시사점

- 자유국민연합의 경기부양책 실시는 우리 기업의 수출과 투자진출 전반으로 보았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인프라·건설·재생에너지·광산업과 같은 유망 시장 공략 필요
- 다만 짚어지는 내국민·내국기업 우선(Australia First) 정책(외국인투자 승인기준 강화, 비자제도 강화 등)에 유의할 필요. 끝.

작 성 자

- 신남방팀 박현성
- 시드니 무역관 김보혜
전희정

Global Market Report 19-085

2019년 호주 총선 결과에 따른 정책방향 및 시사점

발 행 인 | 권평오
발 행 처 | KOTRA
발 행 일 | 2019년 5월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 화 |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 www.kotra.or.kr
문 의 처 | 신남방팀
(02-3460-7671)
I S B N | 979-11-6097-990-9 (95320)

Copyright © 2019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